



12면

올해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에 644억원 투입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음 3월 7일) 제250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발전 백신 또 전국 확산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 코로나 선제적 모델 인천·대구·대전 등 추진... 도내 7개 시군 동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해 전북도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지원금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내 시군도 집단감염 위험성이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해 긴급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27일 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PC방, 노래방, 학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대구시도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휴업을 권고하는 업종에 대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대전시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PC방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서울 강남구는 자발적 휴업을 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 경남 진주시는 휴업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

원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행정명령대상시설 지원을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적극적 동참 유도라는 동일한 목표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전북도의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수범 사례로 강조했고, 해당 시설의 피해를 덜어주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는 지자체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시군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신속히 나서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1만3,000여곳에 대한 긴급지원금 70만원 지급과 함께 각 시군도 실정에 맞는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현재 행정명령대상시설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결

토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임실, 순창 등 7곳이다.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목욕탕, 찜질방 등 108곳에 70만원씩 모두 1억1,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단란주점 18곳에 모두 1,260만원, 완주군은 단란주점과 장애인시설 27곳에 모두 1,90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모두 560만원, 순창군은 단란주점, 에어로빅, 당구장, 요가원, 스크린골프장 등 13곳에 모두 9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 군산시는 당구장, 탁구장, 단란주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고, 김제시도 탁구장, 당구장, 단란주점, 미용실 등에 대한 긴급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선한 백신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실천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게 하고 도민과 지역경제의 안녕을 위해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안정화시키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비상 재난상황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일으킬 희망의 마중물이 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희망의 마중물' 5만여 명 혜택... 내달 24일까지 신청

직장건보 본인부담 6만6770원 이하... 1인당 52만7000원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 시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재난기본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분석해서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활용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비상 재난상황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일으킬 희망의 마중물이 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며 "오늘부터 다음달 24일까지 29일간 시민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의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우리는 비상경계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시의회, 전문가, 공직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틀을 마련했다"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 시민들과 일시적인 소득 감소층을 대상으로 신청절차는 시민의 입장에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은 3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전주시민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4만726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

득이 감소한 시민이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세를 23만원 이하 납부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 6만677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7만467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광사업체 등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무급 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학습지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지원은 안된다. 단, 공무원, 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지자체 지원 대상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together.jeonju.go.kr)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 근로자는 지난해 12월~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통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휴·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 2월 1일 이후 휴·폐업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한 접수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또는 중복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 휴대용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2만7000원을 통장 없이도 카드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입,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이 같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본격화되면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자체 지원에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동안 더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소와 함께 △지원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미친 부가가치적 효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지역사회의경제와 정부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평가·연구해 향후 재난 등 유사상황이 발생하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위기에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사회적연대를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도록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서울과 경기, 강원, 경남 대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 원칙, 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와 자문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상 기자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골프트로피·상패제작전문 국제로타리용품 대리점

광고사업부

트로피/상패/명패
실사현수막/각종깃발
팸플렛/리플렛/각종인쇄

판촉사업부

기념품/판촉용품
단체복/기념타올

전주시 완산구 문화광장로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

'신입생 0명' 서해대, 이사회도 교육부에 폐교 요청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않은 군산 서해대학이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서해대학(학교법인 군산 기독교원)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에 폐교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의 자진 폐교는 지난해 수시 1·2차 전형에서 418명 신입생 모집에 86명(17.5%)에 그치면서 불거졌다. 신입생 급감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교수와

전임교원, 직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38억원에 달한다.

결국 교직원들은 이달 초 교육부에 '강제 폐교요구' 등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정 악화로 교직원 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신입생까지 받지 못하면서 학교 운영

이 불가능하다"며 폐교 결정을 설명했다. 서해대는 지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I'로 분류되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11명의 신입생이 등록했지만, 학교 측이 입학포기서를 받고 다른 학교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대는 1973년 군산전문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은 뒤, 1977년 군산실업전문대학, 1983년 군산전문대학, 1998년 서해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군산=김정훈 기자